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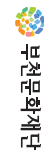
14596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TEL 032.320.6300

FAX 032.326.6929

www.bcf.or.kr



2017
정책웹진 만



부천문화재단 정책웹진 「10,000(만)」은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에게 국내외 문화정책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년 5월 창간되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최소 10,00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만 시간의 법칙’을 인용하여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10,000시간의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천문화재단 정책웹진 「10,000(만)」을 통해 부천시민 누구나 문화에 ‘만만’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문화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자(滿 ‘찰 만’)합니다.



‘2017 정책웹진 「10,000(만)」’ 무크지는
2017년 한 해의 원고를 ‘지역’, ‘도시·공간’, ‘문화정책’
세 개의 키워드로 재분류해 연간 정책이슈를 조망합니다.

지역

심곡연가(宴歌) • 류성호 • 7

지역문화재단 역할의 재구성 • 손경년 • 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미꽃 길을 놓아보자 • 조도자 • 14

축제의 가치를 빛나게 할 룰 • 김기석 • 17

지역예술인들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특별시를 꿈꾸자 • 고희재 • 20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을 축하하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 고경숙 • 23

도시 · 공간

문화도시의 의미 제언 • 조광호 • 28

도시재생, 지역협치, 그리고 시민주체 형성에 대하여 • 이원재 • 33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서서 • 정윤수 • 36

거리에서 경험한 낯선 즐거움 • 이상민 • 39

박물관의 진정한 가치 증대 방안 • 김동선 • 41

문화정책

웰다잉이라는 문화변동 • 김평수 • 4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 • 채경진 • 48

장애와 예술, 그리고 특별한 사건 • 김인규 • 52

‘빅브라더’ e-나라도움 • 고영직 • 55

문화예술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모두 획득하기 위하여 • 이상민 • 58

현장의 혼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언어와 레이어 • 김정미 • 60

문체부,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 • 김은영 • 62

현시대 영유아의 뇌 잠깐 들여다보기-감각과 지각과정을 중심으로 • 장재키 • 65

지역

심곡연가(宴歌) • 류성호

지역문화재단 역할의 재구성 • 손경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미꽃 길을 놓아보자 • 조도자

축제의 가치를 빛나게 할 룰 • 김기석

지역예술인들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특별시를 꿈꾸자 • 고희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을 축하하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 고경숙

심곡연가(宴歌)

류성효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심곡천이 복개된 지 30년 만에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다. 2011년에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부천의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곧 4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차도 위를 달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지하의 어둠 속에서 하천은 흐르고 있었다. 심곡천의 개발 형태는 대체복원으로, 자연생태환경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하는 원형복원이나 유사복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구조물에 더 고민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단계에서 공간의 디자인과 활용에 대한 고려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인근 주민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장소를 찾기 위한 요소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상태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 단순히 조경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을 방문할 만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콘텐츠와의 결합이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부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에서 심곡천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몇몇 사례를 소개해 본다.

필자가 독립문화공간을 운영하던 부산대학교 인근에는 온천천이라는 하천이 있다. 지역의 거의 유일한 공원이자 광장이기도 했던 그 곳은 청년들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별화 된 모습이 종종 관찰되는 곳이었다. 특히 이곳은 한국의 주요한 그래피티의 발상지이자 가장 큰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유명했다. 언젠가 하천 정비사업을 계기로, 이미 상당히 넓은 구역에 작업되어 있었던 그래피티를 제거하면서 지역의 강력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믿고 있던 콘텐츠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역 청년들은 온천천을 대표하던 문화적 상징을 제거해버린 지자체의 정책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제껏 하천변 공간이 청년문화로서 특정 세대에 한정적으로 소비되었다면,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를

소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실천에 옮긴 것이 ‘온천천 문화살롱¹’이다. 이는 2011년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도시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부산회춘프로젝트²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다. ‘온천천 문화살롱’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청년문화단체의 콘텐츠를 공간에 맞게 구성해 30회 동안 진행한 사업이다. 1970~1980년대 학번이 부르던 민중가요를 동시대 청년들의 음악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환경을 생각하는 재활용 컨셉의 미술작품 전시와 체험, 사연과 함께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다방 프로그램도 있었으며 지나가던 시민들이 편하게 동참해 음식을 나누며 예술에 취하던 예술포차도 운영되었다. 그런가하면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삶을 함께 고민하는 연극도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었고, 스윙댄스 동호회는 잠깐이면 배울 수 있는 레슨과 함께 하천변에서 춤판을 열었다.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진행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은, 세대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호흡한 기억으로 모두에게 남겨졌다.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기획자의 결혼식이었다. 기획자는 지역 주민을 초대해 마을잔치의 형식으로 자신의 실제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는 하천을 주요한 문화매개장소로 선언하고 공증하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공간은 사람과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장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참여와 활용, 배려와 보호가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 뉴올리언즈에 사는 Candy Chang에 의해 시작된 ‘Before I die³’는 참여형 작업으로, 개인의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이다. Candy Chang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버려진 집의 한 벽면을 칠판으로 만들어 ‘Before I die, I want to’라는 문구와 함께 밑줄을 그어 분필을 채반에 담아놓았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필을 들어 자신이 죽기 전 하고 싶은 일을 적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해적이 되고 싶다고 했으며, 누구는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누군가의 기사가 되거나, 떠난 연인을 잡고 싶다고도 했다. 유쾌하거나 진지하고, 거창하다가도 때로는 소박하지만 그 칠판에 적힌 내용은 바로 침묵하던 ‘이웃’이 던진 날 것의 소망이었다. Candy Chang은 말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공공장소가 얼마나 강력한 요소가 되는지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다.”이렇듯 심곡천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밀라노의 ‘PUBLIC DESIGN FESTIVAL⁴’, 런던의 ‘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⁵’, 안양의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공간을 설치예술로써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장식적인 기능이나 예술적인 가치에 우선한 결과물보다는 지역의 시민활동, 문화자원, 역사자료, 생태환

경 등과 연계된 콘텐츠를 담아내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구조물이 공간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화, 애니메이션의 콘텐츠를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놀이기구 등을 하천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설치하는 작업, 길게 조성된 하천변 동선을 따라 지역의 문화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구조물을 활용한 접근 외에, 하천과 기존의 지역행사를 결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심곡천을 연계하여,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영상과 빛, 사운드 등으로 하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특별한 경험을 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연출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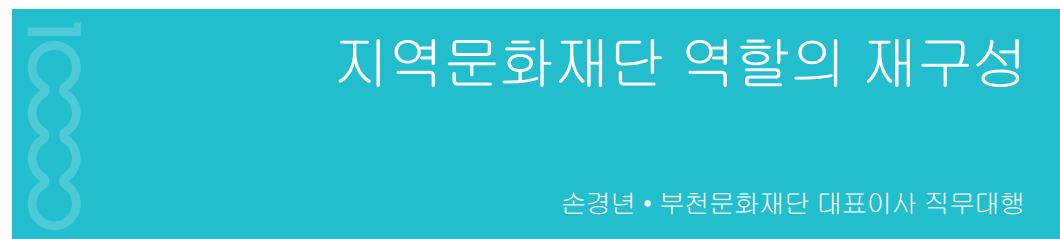
심곡천은 부천을 가로지르는 수도권 지하철 1, 7호선의 중심이자, 주요 상권과 도보로 연결된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심곡천의 위치처럼, 이곳은 휴식과 노동의 사이에서,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대학으로서 ‘하천대학’을 만들어 하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모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하천에서의 활동을 함께하는 오픈대학의 형태로, 하천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 프로젝트 기획,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로써 지역의 주요 공공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심곡천이 표방하는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환경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기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성된 환경을 뜻하며, 결코 일방적으로 조성되고 작동되지 않는다. ‘생태’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지역 주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유기적으로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1 온천천 문화살롱 블로그 참고. (URL: <http://blog.naver.com/citymyth>)
- 2 관련기사: 박주영, “재능·기 많은 젊은이들이 부산문화를 바꾼다”, 조선일보, 2011년 8월 18일자.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8/2011081800279.html)
- 3 'Before I die' 공식 웹사이트 참고. (URL: <http://beforeidie.cc>)
- 4 밀라노의 'PUBLIC DESIGN FESTIVAL' 공식홈페이지 참고. (URL: <http://www.publicdesignfestival.org>)
- 5 '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 공식홈페이지 참고. (URL: <http://www.londonfestivalofarchitecture.org>)

※ 본 원고는 부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연구 중 필자의 「도심 수변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을 기반으로 작성한 칼럼입니다.



공감·호감·연민 그리고 시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정책을 꿈꾸며¹

지그문트 바우만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현대세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상화로 젊은 세대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이득도 있지만, ‘유동하는 세계’에서의 우리는 ‘거짓말과 환영, 쓰레기, 폐기물 같은 껍질들을 분리해내서 읽을 만한 낱알과 진리의 낱알을 뽑아내도록 도와주는 탈곡기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바우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체성을 재부팅하는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양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즐거움의 질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예술적 자유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은 예술가의 존재와 창조적 행위의 보장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책임,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또 주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5월, 예정되었던 시기보다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최근 국무총리 인준이 되었으니, 새 정부 조각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각계각층은 새 정부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간의 문화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함께 ‘문화민주주의’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안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역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정책방향이 비교적 사회의 가치지향과 맞물려 제도적 성장을 해왔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실행과 인식의 수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여전히 허약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다루어왔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생활문화 활성화, 시민참여형태의 문화정책 수립기반 마련 등의 의제를 보다 실효성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은 여타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당장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양식과 깊이 관계하고 있어서 선부른 정책 적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화예술의 가치와 힘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있을 것’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동의한다면, ‘지금’ 적절한 문화정책 수립을 통해 삶의 조건을 다시금 구조화하고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데 애를 써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새 정부에서의 대통령, 장관, 국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타인과의 공명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이 요구되며, 바로 이 점에서 문화정책이 특정 개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이며, 새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예술적 자유 및 표현과 관련하여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장려·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문화를 ‘어떤 공간 내의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 한다면, ‘공유되는 과정의 역사성’이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화를 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한 문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적용되는바, 이 경우의 정책과제는 문화 수혜범위의 확대와 문화공급의 실질적인 증가 등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두에 의한 문화’가 있다. 이는 소수 혹은 특정계층의 지배문화나 고급문화 중심이 아니라 모든 시민으로부터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전제로 공공문화시설의 형성과 이용에 의한 공개적인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시민적 연대성의 기본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상화된 문화’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의 생활세계로부터 특별하게 취해야 하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개념과 시민의 관심사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형태나 의미형태들을 일상적인 문화적 혜택이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의미하며, 여기서는 생활문화(예술) 개념과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헌법」 제 22조 1항²과 「문화기본법」 제4조³를 기본으로 삼을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1.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위해, 문화다양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문화취약계층도 예외 없는 문화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최소기준’의 설정
- 최저임금, 생활임금처럼 삶에 있어서의 생필품으로서의 생활문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마
련 및 체계 구축
- [문화누리카드]의 지원한도 현실화 및 기준근거 마련
- 지역의 공공문화공간 조성시 장애인 예술가의 무대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건축기준 제시

2.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역에 따른 차별
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문화공간을 통해 문화예술을 경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영유아의 감수성을 보호하고 콘텐츠를 개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
- 지역미디어센터를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초·중등 의무교육의 지원체계 마련
- 기초지자체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감상, 체험 등의 일상적 문화예술 및 교육 경험 기회 확대에 대한
매칭 예산 지원

3. 행정구역 중심의 지원에서 생활문화권 중심의 지원체제로 만듦으로써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 생활문화권 중심의 문화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에 있어서 중복성을 방지하고 지역끼리의 경
쟁적 문화공간 조성을 지양하도록 유도
- 각 기초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사람, 공간,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자체 간
의 협력을 통한 ‘문화제휴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지역에 기반 한 기초지자체는 문화사업을 직접 기획·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
템을 마련, 기초지자체들의 문화제휴 사업을 묶어 ‘광역문화꾸러미’로 활용

4. 청년예술가의 생존, 성장, 활동이 가능한 청년문화서식처를 지역 내 조성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창
업, 창작에 기여한다.

- 예술전공자들의 활동영역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청년예술가의 창의적인 시도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정산 절차를 면제
- 청년예술가 주체들이 서로 연대, 네트워킹하면서 지역공동체 의제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5. 기초지자체 행정공무원의 ‘문화직렬제’ 도입

- 문화예술 분야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기관)과의 문화정책 업무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참고자료

- 1 본 글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토론회(2017. 4. 28.)의 필자
의 토론문 중 일부를 재정리한 내용임
- 2 「헌법」 제 22조 1항과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3 「문화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미꽃 길을 놓아보자

조도자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장미대선이라고 불리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여럿 있었지만 여성정책을 보는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각 후보의 10대 공약에 여성정책, 양성평등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민주화 열풍이 지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정책을 따져보는 것이 본격화 되었다. 각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여성정책만 따로 질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고 많은 논의들이 제도화 되었다. 여성부와 같은 전담정책기구의 출범, 여성의 공직 대표성 제고, 폭력방지법, 학교 급식, 보육정책, 출산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등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의 출발점들이 그 시기에 본격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은 여전히 변방의 작은 변수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양성평등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향후 정부가 움직여야 할 주요 10대 방향키가 되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배경에는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되었고, 여성의 참여 없이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한계상황이 왔다는 절박함이 있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동원되는 예비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이 겪은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제약과 배제의 결과는 참혹하게도 비혼 여성들이 급증하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다. 이런 현상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써 10대 공약 안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을 수 밖에 없고 그중에 더 진일보한 것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

시하고 칼퇴근법을 약속하였다. 또한 남성육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를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의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 부모들의 유연근무 확대와 아동보육에서 초등 전 학년의 돌봄교실 확대 등 사회적 돌봄 장치들을 강화했다.

이번 정부에서 여성의 내각 참여도 3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하였고, 그 상징성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구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혜택의 범위가 기존과 같이 제한적이라면 곤란하다.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이나, 매주 특정일을 야근 없이 퇴근하는 가정의 날 시행, 출산 육아휴가 보장 등 여러 가지 가족친화 정책들과 법적 장치들이 공공기관의 우선 채택과 대기업의 적용으로만 이어져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의 범위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천과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소기업은 커녕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도시에서는 일·가정 양립이란 말 자체가 체감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말일 수 있다.

산업전사로 불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며, 엄청난 성장을 통해 앞만 보고 뛰어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성장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피로감으로 변하여 모든 계층에서 휴식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 일을 통해 성취하는 보람과 함께 개인의 삶에도 집중하며 행복하고 싶은, 일과 삶의 균형 잡기가 보다 중요해 지는 시대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일을 하면서 가족과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시대에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다 실행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부터 시작하고, 영세한 사업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지역에서 함께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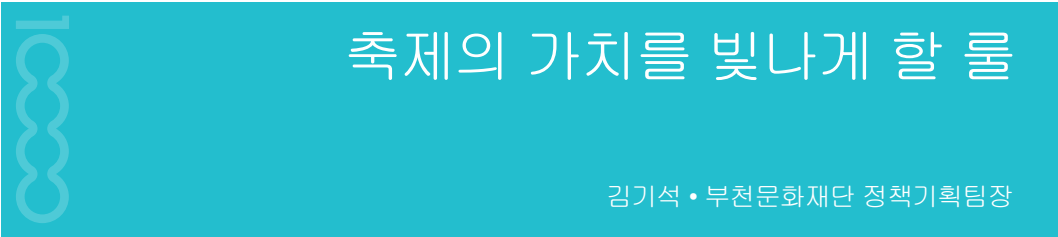
일단 올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는 부천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정책과 제도로써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문화 형성과 확산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면 가족과 함께 일상 속에서의 적극적인 실천도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교



육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근래 몇 년 사이에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남성을 앞질렀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마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고, 결혼과 출산·양육을 하면서도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워킹대디의 가사와 양육, 돌봄과정에서의 참여가 필수다. 여성의 삶에서 사회활동과 일을 빼앗고 독박살림과 독박육아의 의무를 지운다면 남성의 삶에서는 일만 남고 가족과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의 즐거움과 보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남성도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가족들이 함께 가사를 분담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유연근무, 단축근무는 물론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도로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생활에 미련 없는 진급포기자로 비칠까봐 눈치 보기와 조직 안에서의 눈치 주기가 여전하지 않은가 말이다.

가족 안에서의 맞벌이와 맞살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여성의 참여와 발전이 당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의 맞살림 능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맞살림, 맞돌봄, 맞성장의 장미꽃 궤도를 놓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천, 일과 쉼이 있는 생활의 균형 잡는 꽃길을 놓아 보자.



얼마 전 스페인 유소년 축구리그에서 25:0으로 승리한 팀의 코치가 해임이 됐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유인즉 너무 큰 점수 차로 이겨 상대팀 어린 축구 선수에게 정신적으로 큰 굴욕감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 여기는 구단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해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스포츠에 존재하는 불문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사건 중 하나다.

일반적인 룰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다. 가장 많은 불문율을 가진 야구를 보면 ‘홈런을 치고 나서는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다’거나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을 때는 번트를 하지 않는다’, ‘벤치클리어링을 할 때는 모든 선수가 동참해야 한다’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불문율이 존재하고 또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는 왜 이런 불문율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다수의 사람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기인 만큼 룰이 다룰 수 없는 정서(정신)적인 부분들을 담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기에 야구의 그 많은 ‘불문율’이 관통하는 것도 결국은 2가지를 지향하는데 하나는 ‘우리 팀을 위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존중할 것’이다. 스포츠의 보편적인 정신이 불문율에 오롯이 담겨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름 축제들이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축제들의 정신을 관통하는 명시적인 룰과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불문율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되어야할까 생각하게 된다. 스포츠 경기의 플레이어는 운동선수들이지만, 축제의 플레이어는 예술인(단체)뿐 아니라 지역민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플레이어가 해당 축제의 룰과 불문율을 모르고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축제는 지방자치제 이후 성공적인 몇몇의 지역축제가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 문화 특성화, 도시 이미지 제고, 방문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축제가 이런 목적과 목표를 공히 갖고 있다. 이렇게 지역축제에게 얹힌 목적의 무게감이 어느덧 축제의 존재 이유가 되어 내적 동기는 멀어지고 축제인 듯 축제 아닌 축제 같은 행사가 축제와 축제가 아닌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도 한다. 그래서인가 그 만큼의 무게감을 갖고 축제를 준비하는 플레이어(주최, 운영자)에게서 전이된 고단함은 때론 관람객에게까지 쉬이 전이되기도 한다. 누구나 즐거워야 할 축제에서… 바로 함께 지향하는 바를 생각하게 하는 룰과 불문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울 새로운 표준을 말하는 뉴노멀 시대(New Normal)¹라고 한다.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불안한 미래, 급기야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라고 하는 변화된 사회에 대응할 변화된 기준의 요구이다. 이렇게 기준이 혁신되는 시대에 지역 축제의 기준(특히 불문율)을 고민해 본다. 소통과 공감의 녹을 먹고 있는 문화예술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고, 또 도시 발전 논리에 따라 축제의 지향을 방문객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결 짓는 것으로 혹여나 축제 본연의 가치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축제의 핵심에 다가가야 한다. 그 핵심에 플레이어(주최자, 지역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할 터… 지역의 많은 축제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축제의 비전,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역민들이 축제의 플레이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역민과 축제관람객 간에 공감대 형성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축제는 지역민들이 축제의 공급자이자 가장 큰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반 위에 외부 관람객들이 일상과 다른 축제의 일상에 쉽게 몰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축제가 ‘도시공동체’, ‘마니아공동체’, ‘가족공동체’ 등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 축제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축제를 키우는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까지의 축제의 성과를 찬찬히 살펴보고 전략을 고민하고 이 전략을 위한 룰(불문룰 포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피할 것인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한 전략과 시간의 축적 속에 각 축제만의 룰과 불문율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고 언급한 장하준 교수 메모를 상기하게 된다. 모든 문화행사가 그렇듯 축제의 가치도 지금이 아닌 지향점을 함께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그 속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존중되는 지역 축제의 룰과 불문율

이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뉴노멀 시대(New Normal):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경제 질서로 통용되는데, 일반적으로 2007~2008년 진행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세계 채권펀드 핼코(PIMCO)의 최고경영자 무하메드 엘 에리언이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18653&cid=55571&categoryId=55571>

지역예술인들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특별시를 꿈꾸자

고형재 • 부천미술협회장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중 문화예술계를 편으로 갈라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검열의 만연함이 있었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인 비판정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철저히 붕괴시킨 것이다. 다행히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구 정권의 실정에 분노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신 정권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약 중에는 ‘제2 블랙리스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했으며 정부, 지원기관, 예술계와의 공정성 협약체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도 제시함과 동시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라는 것으로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이 전국적인 문화융성으로 건축되려면 지방자치로 대변되는 지역에서의 올바른 자치 문화예술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는 현재 어느 정도 문화예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속 및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필과 영화,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4대 문화사업 외에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예술계의 처우 및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치적인 지역문화 활성화와 어쩌면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라는 것이 시간과 역사가 바탕이 되어 시민의식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부천의 전통이 된다면 문화특별시와 가장 부합되는 것이다. 현대는 대중매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회이고 대중들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많은 정보의 파급을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문화(예술)의 소비자이고 그들이 문화(예술)생산자와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문화도시의 전통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천착해 온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의 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볼적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원방안이 곧 지역문화 활성화가 되고 또한 열악한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일부 복지

도 되는 문화특별시에 걸 맞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 창작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있지만 아마 문화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일부 특정 문화예술인을 제외하고 지역의 대다수 문화예술인은 그들이 생산한 문화예술이 곧 밥이 되지 않는다. 100% 밥이 되는 지원책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결코 만만치는 않겠지만 문화특별시를 꿈꾸는 부천시라면 한번쯤 고려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어 각종 문화사업비의 지출경비에서 문화예술인에게 직접지원이 가능한 창작지원비의 지출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가깝고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 문화예술작품 구입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새롭게 운영하여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문화예술을 연계시켜 ‘문화예술의 상품화’ 및 ‘산업생산품의 예술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상공인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 세계의 문화 강국 및 문화도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부천시 도시디자인 정책에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도시미관과 관련한 간판, 풋말, 공원, 건축 등 도시디자인의 모든 유, 무형의 이미지에 지역 문화예술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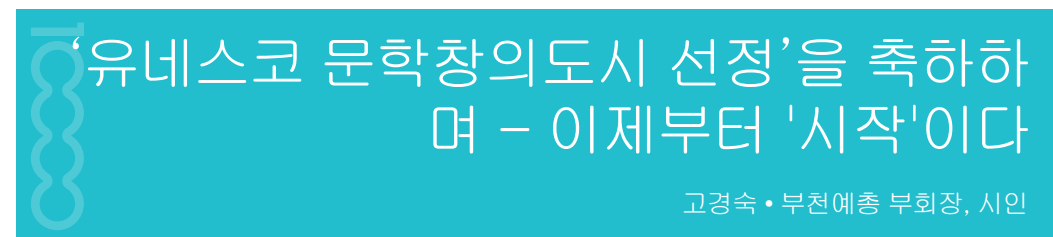
부천시 문화예술인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은 바로 부천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생하여야 한다. 지금 베네치아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실거주자가 쫓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으로 관광객을 적대시하고 ‘관광객 아웃’이라는 시위를 벌인다. 이에 시당국은 관광객 제한을 포함한 원주민 지원책을 늦게나마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문화예술정책도 이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 명망가 위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는 것을 자제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이 설 자리를 마련해 발전 및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그들이 중심이 된 진정한 문화도시가 아닐까?

‘문화예술 재능기부’를 기대하지 말고 싼 값으로 문화예술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세상의 모든 노동이 소중한 것처럼 문화예술도 고도의 고부가가치를 지닌 노동이다.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공분하는 것 같이 문화예술을 대가 없이 수혜 받으려는 것

과 값싸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발적인 것이 아닌 이상
정당한 비용이 당연한 문화예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문화부를 만들었던 국가는 프랑스이고 초대 장관은 ‘앙드레 말로’였다. 그는 ‘민주
화’ ‘확산’ ‘창작’으로 문화예술정책의 뿌리를 심었고 이 세 가지 정책인 민주화(현대예술의 진흥
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접근), 확산(문화예술을 도시와 지역에 분산하여 예술의 분권화), 창작(분
산된 예술인들의 꾸준한 창작활동 지원)으로 국가문화예술의 활성화라는 꿈을 꾸었다.

“꿈을 꾸는 자, 꿈을 닮아 가리라.”라는 그의 말처럼 부천도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 문화특별시
라는 꿈을 닮아가면서 ‘지역문화 활성화’ 그 꿈을 이룩하였으면 한다.



시월의 마지막 밤을 뒤척인 것은 은사시나무 이파리들만이 아니었다. 세상일이라는 게, 일을 추
진할 때는 극(성공)과 극(좌절)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옳은 거지만, 이번만은 아무도 실패를 생
각하기 싫었었다. 그것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추진에 올인할 정
도로 부천시가 열정과 노력을 바쳤다는 증거이다. 꽤거다! 환희이다!

심곡천을 벗겨낼 때부터 환한 하늘을 인 물줄기들이 긍정 쪽으로 길을 터주고 있었던 것이다. 문
학인들조차 ‘부천에 문학이 있느냐’ ‘유네스코는 무슨?’ 하며 비아냥거릴 때도 묵묵히 희망 쪽을
바라본 것은 전문가적인 소신이 아니라,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
게 드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그다드, 에든버러, 프라하 등 고색창연한 도시들이 내뿜는 역사와 전통에 비해 문학적 콘텐
츠가 빈약한 우리는 ‘시민’이라는 인적자원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21세기
는 몇몇 문학인들의 유명세만으로 시대적 변화를 이기지 못할 테니까, 또한 미래가 요구하는 문
학도시란, 시민과 관, 전문가그룹(문인)이 수평적 위치에서 횡으로 관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시민이 중심에 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다행히
문화특별시를 주창하던 시절, 개별적으로 성장 발전한 만화와 자랑할 만한 도서관의 운영시스
템은 그 근간에 문학적 바탕을 깔고 있었기에, 구슬을 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천문학을 얘기할 때 주로 서울과 인천에 ‘끼인 문학’이라고 폄하하곤 한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도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정주의식이나 정체성이 희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
화도시, 문화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이후, 부천시의 괄목
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부천문학의 현주소도 변모했다.

- 수주 변영로, 정지용, 은성 목일신, 필벽, 양귀자 작가 등 부천에 연을 둔 빛나는 문학인들이 도시 브랜드를 드높였다.
- 빛나는 문학인들 이외에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지역문학을 지킨 문학인들의 역사는 시민 저변문학을 확대시킨 장본인들이다. 지금도 각 문학 단체, 복지관, 문화센터, 학습센터 별로 살아있는 부천의 문학, 움직이는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 33년 역사를 지닌 (사)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그 외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복사골문학회, 부천여성문학회, 교사문학회 등 크고 작은 단체와 동아리들이 활동 중이다.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뚝뚝 뭉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 타 장르에 비해 소외되었던 문학은 개별적 작업에 익숙한 문학인들의 전형성도 관계있지만 부족한 예산, 단체의 고령화 등 시정되어야 할 문제들도 숙제이다.

이제 닳을 걸어올릴 때다. 새로운 항해는 이제부터다.

유럽의 도시들과 견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태까지의 여정이 통과여례의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산재된 역할들은 어쩌면 부천의 미래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서서히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기쁨에서 빠져나와 다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할 때이다.

첫째는 정권이 바뀔에 따라 정책이 뒤바뀌는 일 없이 부천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탄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둘째는, 새롭게 구성될 운영그룹에 지역문인들이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참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일부 위원회처럼 부천 실정을 하나도 모르는 중앙 문인들이 대거 포진해서 지역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문학은 순수하게 정치색 드러내지 않고 부천의 미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부천사랑’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셋째, 만화산업과 도서관 사업 외에도 순수문학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 공연 장르의 지원 금액에 비해 기초문학인들에게 지원되는 발전기금의 액수는 전국 최하위다. 얇은 시집 한 권 내는 금액의 1/5인 일백만 원의 지원금은 아무리 소극적이고 조용한 문학인들이라지만, 허탈할 때가 많다.

넷째, 지역에 봉사하지 않고, 베드타운 역할만 하며, 타 고장에서 활동하고 부천에서 혜택만 누리려는 문학인들이 부천에서 대접받음으로써 정의와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문학인들에게 지원과 존경이 돌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민과 관 사이에서 사명감을 갖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학인들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검증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문학은 아웃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탓만 하고 융합적 사고로 타 장르와의 연계 등 발전적 모색 없는 단체들의 타성에 젖은 프로그램 등은 철저히 가려 배제시키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요구한다. 새로운 아이টে姆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행사들에 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문학의 활성화는 시민학습이나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부천예총,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재단 등 네트워크의 결성으로 소통과 정보공유가 절실하다.

우리는 우리의 저력을 보았다. ‘젊은 부천’은 이러한 저력을 그대로 전통으로 물려받을 부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또 천천히 시뮬레이션 해본다.

도시·공간

문화도시의 의미 제안·조광호

도시재생, 지역협치, 그리고 시민주체 형성에 대하여·이원재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서서·정윤수

거리에서 경험한 낯선 즐거움·이상민

박물관의 진정한 가치 증대 방안·김동전

문화도시의 의미 제언

조광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1세기 현재 기존의 국가경쟁 구도를 넘어 도시경쟁 차원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도시 고유의 문화는 문화적인 도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추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Glocal)’은 매우 중요한 양상이자 흐름이며, 지역적인 것이 글로벌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28일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만의 도시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 및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의 제2조 제6항에 기재된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진흥법」 中 “문화도시”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라는 용어는 정책적 용어로서, 이에 대한 학계와 각 분야 전문가, 법안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광의적으로 문화자원, 문화 활동, 문화적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결국 이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도시로서 그 범위를 넓게 하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용어가 지닌 상과 이미지가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용어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방향이 오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실재로서 구현하여 상과 이미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정받게 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는 사업의 목표와 사업비 운영 방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신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적 성격에 따라 해당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에서 주도하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부산영상문화도시조성사업’,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공주·부여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추진 기간은 8년에서 30년으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문화사업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문화적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의 조성에는 그만큼 오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각 지역에서 고민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시행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지금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 관리가 다소 불합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작업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거의 여러 사업에서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휴먼웨어로서의 인적 기반과 소프트웨어로서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각계의 고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터를 닦아야 대들보를 세울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조성은 가장 기본적인고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 없이 하드웨어만을 양산하면, 이 하드웨어를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기획할 때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를 저을 때는 뱃머리의 방향이 중요한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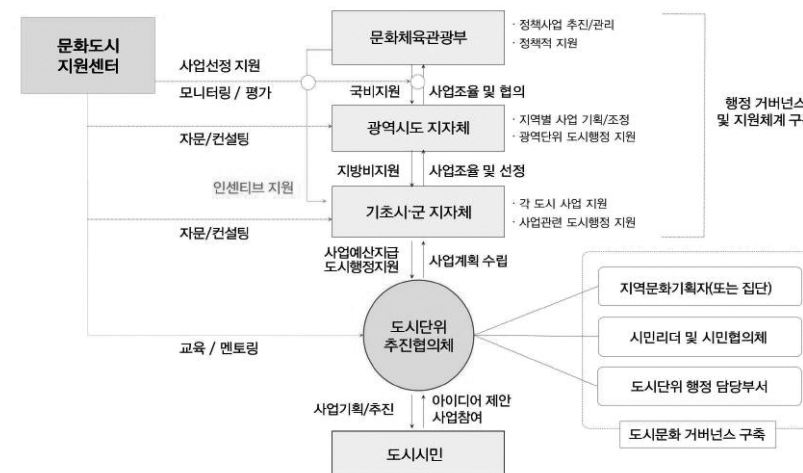
도시 단위의 문화적 부흥을 위한 노력은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온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에서 운영 중인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사업과 유네스코에서 현재 추진 중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럽 문화수도는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의 원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로, 1970년대 후반 유럽도시의 산업 생산력이 쇠퇴하면서 1983년 당시 그리고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가 유럽사회 내의 문화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1985년 아테네에서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유럽 문화수도는 유럽연합 가맹국의 각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문화수도를 지정하며, 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는 경쟁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한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고 교류의 개념을 중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램을 지정되는 연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심사를 통해 유네스코가 선정한 도시를 말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러한 도시가 각기 지닌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6개 도시(서울, 부산, 전주, 광주, 통영, 이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되어 있다. 두 사업은 도시만이 가지는 문화적 특색을 중심으로 도시 성장 및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도시의 문화화에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협업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의 예비단계 성격을 가지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역시 문화적 도시 기획 사업으로서 이를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을 가진 지역문화의 특화 작업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명시하면서, 지역 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과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도시의 ‘문화’라는 용어가 복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지 않으며, 타자와 타자가 만났을 때 생성된다. 그래서 항상 ‘문화’라는 용어 앞에는 개인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닌 청년, 여성, 노인, 직장, 가족 등 다양한 세대와 집단을 갈음하는 명사가 붙는다. 문화가 복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수가 존속되려면 그 속의 단수 간 이해와 연대가 필수불가결하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문화도시’를 위한 지난 10여 년의 걸음은 도시 경영이니, 경제효과 창출이니 하는 건설적 의미를 분명히 지향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가치를 둔다.

따라서 그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해서 문화도시 지정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이 될 때까지는 약 2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과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투자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면밀하게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 내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기까지 도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비 사업을 실천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체부의 정책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도시경영과정을 살피어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금껏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차별화된 것이다. 대개 정부지원 사업은 단기성, 결과 중심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부 내실을 채우기보다 외형적인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문화적 도시경영체계 구축의 기본이 되는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성과도출 중심적 틀을 과감히 깬 실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여러 사업의 경험치를 통해 얻어낸 변화로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도시’의 근간에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자원의 관리나 콘텐츠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문화적 철학과 가치를 발현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지역, 세대, 빈부

간 격차가 멀어지는 현대에서, 문화는 이와 같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기제로서 개인과 사회가 자생력을 갖춘 세계를 그리고자 한다. 나아가 이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고,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미래 전략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조광호(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 방안 연구(안)」, 『문화도시문화마을심포지엄: 도시와 마을에게 길을 묻기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5), 「문화도시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2015 부평문화포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조광호(2016),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제안 연구」, 「2016 문화예술정책연구 A: 부천을 바라본 6가지 시선」, (재)부천문화재단

※ 본 원고는 부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연구 중 필자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제안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칼럼입니다.



도시재생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오래된 화두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 도시재생의 유행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소개된 해외 사례가 바로 영국의 도시재생이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있어 영국의 런던, 게이츠헤드 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재생의 사례들이다.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꾸고(테이트모던), 몰락한 탄광촌을 세계적인 예술도시이자 관광지로 변화시킨(게이츠헤드의 발틱미술관, 세이지음악당 등)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는 이미 한국에도 다양한 경로와 자료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것과 “제대로”, “잘” 공유된 것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도시재생은 폐 산업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오인되어 왔으며, 심지어 기존의 개발업자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으로 재전유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둘러싼 한국과 유럽(런던)의 역사, 문화, 현재적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유럽의 사례에서 화려함을 빌려왔을 뿐 도시재생에 내재한 사회적 맥락과 혁신적 가치 등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런던을 비롯하여 유럽의 도시들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가 추진했던 맹목적인 생산력주의와 성과주의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했다. 현대 도시가 생태 파괴, 과잉 공급, 획일화된 상품 미학 등과 마주하면서 런던을 비롯한 도시들이 기존의 일방적인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 예술, 교육 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 도시재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폐 산업시설이나 유휴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생태적인 자원순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문화기획, 예술가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질적인 공급이나 생산보다 창조적인 상상력과 미래지향적인 가치, 공유적 행위를 지향한 결과다. 그리고 교육은 새롭고 가치 지향적인 시민 주체의 형성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제 현대 도시에서 도시재생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념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역에서 물리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통합된 비전과 행동양식”으로 정의된다. 단순한 도시개발, 도시정비,

도시경쟁력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도시재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질문해야 할 때다. 도시재생의 본질적 가치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왜곡된 과정 자체가 전면적으로 혁신돼야 한다. 도시개발의 또 다른 버전으로서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지역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거버넌스(협치)가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시민 주체들과 혁신적인 도시환경이 형성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도시재생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어떤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서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 이웃, 관계 등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이는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도시정비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화두다. 도시의 쇠퇴를 해결하는 것,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등에 있어 행정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출발점에 인간과 이웃, 커뮤니티와 지역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은 쇠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경제 활성화 전략과 근린재생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고 융합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경제 활성화에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리한 아이디어성 사업 추진, 창조경제와 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편 등이 획일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도시경제 활성화 전략만이 아니라 근린재생 전략을 통해 커뮤니티, 이웃 등에 대한 가치적 접근을 활성화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 정책은 국가(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 방향의 설정과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과 장소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경과적이며(Build-Up)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에 의한 도시재생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과 장소에 대한 접근은 개별화된 행정 구조나 사회 제도에 따라 하향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삶의 복잡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경과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물리적 도시정비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둘러싼 주택, 복지, 교육, 문화, 사회문제 등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구조와 지원 체계를 통

해 접근돼야 한다.

넷째, 도시재생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반 주체들에게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통합재생예산(SRB), 뉴딜커뮤니티예산(NDC), 근린재생기금(NRF), 근린지역 일자리기금(WNF) 등의 포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통합재생예산(SRB)은 환경, 통신산업, 노동, 교육, 내무의 5개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던 20여 개의 보조금을 단일 도시재생 예산으로 통합한 것이며, 이후 통합예산(SB)으로 전환하여 한층 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자 목적이 자율적인 주민 조직과 시민사회에 대한 형성 및 지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협치) 및 파트너십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협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협력, 상호 지원 등이 없이는 결코 진행될 수 없는 목적과 구조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도시재생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 내에 다양한 주체가 결집한 조직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이다. 이는 “정부 주도, 하향식, 공급형, 성과주의 등의 패러다임”에서 “주민 주도, 상향식(Bottom-Up 또는 Build-Up), 자율형, 경과주의 등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민주주의가 협치를 통해 지원되고 운영돼야 한다.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서서

정운수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도시사회학자 피터 홀이 비판적으로 살핀 바와 같이 언제나 “‘현대도시’의 중심은 중산층을 위한 장소”였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1960년대 개발 독재에서 70년대 강남 개발을 거쳐 1990년대 신도시 형성과 21세기 도심지 재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빈곤층이 어떻게 도시 외곽으로 방출되었는가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다. 이 진행 과정은, 단지 도심지를 대규모 건물 위주로 ‘재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팎의 풍경을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으로 외화된다. 이를 볼프강 벨슈는 ‘과잉 심미화’라고 불렀다. 벨슈는 “심미화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것들을 성형수술하듯이 인위적으로 뜯어고친 도시 공간에 존재한다. 쇼핑 지역들은 세련되며 생동감 있게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도심지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과 농촌의 휴양지 같은 곳들도 이러한 경향을 지닌다. 어떤 도로의 포석과 문손잡이 그리고 어떠한 공적인 공간도 심미화 열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의 간단한 도식은, 21세기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인데, 무엇보다 이 한반도의 주요 도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서울 도심지의 돌진적인 재개발을 비롯하여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는 물론 부천, 안양, 고양 등의 규모에서도 ‘과잉 심미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문제는 이 맹진에 의하여 단지 기존의 도심 공간이 변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나름대로 버텨오고 간직해온 작은 삶들이 사라지는가 하면 도시를 일종의 공적 영역으로 삼아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주장이나 문화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차단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심은, 그리고 무엇보다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지의 역사적인 공적 공간은 대단히 협소한 개념의 ‘문화 장소’ 정도로 축소된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계획하고 추진한 광화문광장이 그 초기에 대단히 협소한 ‘문화

공간’의 의미만을 강조하여 크고 작은 조형물과 동상과 분수를 ‘구경’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일을 상기해보자. 이로 인하여 광화문 광장은, 저 서양의 광장이나 동양의 장터 마당 같은 역사성을 상실한 채, ‘구경거리’로 구성된 바 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양쪽의 차도를 ‘건너가야’ 도착하는 장소이며 크고 작은 인위적 조형물들을 계속 ‘걸으면서’ 구경해야 하는 장소이며 잔디밭도 구경하고 분수도 구경해야 하는 장소로 시작되었다.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여건은 만족스럽게 제공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도심의 매연과 차량의 소음 사이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어야만 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의 공적 공간이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광장이란 무엇인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공간이다. 일부러 무리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은, 협소한 의미의 문화 체험, 조금 더 야박하게 말한다면 무엇인가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는 공간이 아니라 걷고, 대화하고, 앉고, 사색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중에, 사회적으로 공분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의견의 자연스러운 표출의 장으로도 활용하여야 한다. 광장은 쇼핑몰과 같은 ‘비(非)장소’가 아니며 테마파크 같은 ‘장소성 상실’의 인공적 폐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역사에서, 시민들은 즐기치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장을 원하여 왔고, 역대의 권력은 이를 차단하거나 관제화하려 해왔다. 굳이 일제 강점기까지 소급하지 않더라도,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5.16광장(현 여의도공원)이나 시청 앞 광장의 역할은 ‘국가동원 체제’의 기능만으로 활용되었다. 이 상당한 압력을 뒤흔든 것이 4.19혁명에서 87년 6월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촛불 광장으로 이어지는 열렬한 시민적 에너지였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광장의 기억과 달리, 이를테면 2002 월드컵 광장처럼, 문화적 열망을 바라는 시민들이 도심의 주요 공간을 폭발적인 감성으로 가득 채운 일도 기억해야 한다. 무릇 광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민들의 크고 작은 욕망이 펼쳐지는 광장이라고 한다면, 이상의 역사적 기억들이 언제든 의미 있게 되풀이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광장이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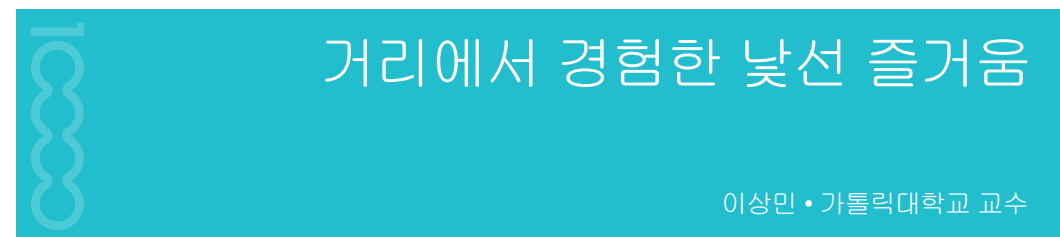
런 점에서, 초기의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 곳곳에 형성된 광장의 의미와 기능은 ‘문화행사 장소’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우람하게 입증한 경우가 바로 지난 겨울 내내 전개된 촛불 광장이다. 지난 해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1만2천여 명이 모였다고 했고 주최 측도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2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에서만 20만명이 나왔고, 민중총궐기와 겹친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을 상회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700만을 넘었다. 그 후의 숫자는 일일이 셈하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거대한 역사적 상징이 되었다.

물론 계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 그것을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국의 권위주의와 군사문화, 그에 따른 청년 실업과 각종 사회문제, 급기야 개인의 몸이 늘 감시받고 억압받는 파괴적인 양상, 이젠 더이상 참담한 모멸감을 견딜 수 없는 몸들이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이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 누군가 ‘동원’한다고 해도 10만, 100만, 200만은 어렵다. 손에는 비록 촛불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다들 뜨거운 햇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생존 조건은 저마다 다르며 그 기호, 감각, 취향도 각자 다르다. 바로 이 ‘수많은 다름’이 의미가 있다.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광장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행진을 한다. 그 많은 깃발 중에는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다. 무한경쟁의 ‘헬조선’에서 나약한 개인으로 방치되어 혼밥을 먹고 혼술을 마시던 사람들 ‘각자도생’이라는 질식할 듯한 공간을 박차고 나와서 광장으로 모인 것이다.

이러한 광장의 역사적 상징과 문화적 의미를, 좀 더 일상화해야 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독재 시대처럼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광장은 물론이요 주요 지자체마다 시민을 단순히 구경꾼의 위치로 제한하는 문화행사 장소의 광장도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들의 일상이 확장되는 공간, 그 문화적 열망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광장, 때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평화롭게 전개되는 광장을 상상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꿀 것인가, 하는 중요한 상상이다.



진조크루(JINJO CREW), 퀵크루(QUICK CREW), 락앤롤(LOCK N LOL). 이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팝핀댄스(poppin dance)가 어떤 춤인지 몰랐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진조크루는 대회를 주관하는 기업이름인 줄 알았다. 물론 비보이댄스는 알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레이크댄스의 정확한 이름이 비보잉(b-boying)이라는 정도의 알팍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사실 내게 비보이댄스는 길거리에서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묘기에 가까운 동작을 싸우듯이 추는 춤으로, 관심 밖 문화였다.

지난 9월 말, 부천 마루광장에서 열린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관람하면서 비보이 댄스에 대한 내 무지와 편견이 깨지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비보이들은 묘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맞춰 춤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 내는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동작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리는 기술을 습득하고 단련하는 데 온 힘과 열정을 쏟아 붓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의 현란한 춤사위에 넋을 놓고 바라보면서 감동했고, 거리에서 세계적 수준의 비보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 시간, 그 곳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광장에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면서 낯설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일탈을 경험하고, 한바탕 잘 놀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마음 속에서는 공연을 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모든 감각이 생동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고, 부천시와 진조크루가 주관하고 주최한 의도적 기획에 따라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축제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기에, 일상의 삶과 구별된다. 축제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며 공동체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대감을 형성한다. 또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과잉되어 분출되고, 지적 행위보다 감각적 행위가 자극되는 경험을 한다. 동시에 축제에

서는 심미적 행위가 두드러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로 춤, 노래, 그림 등의 예술을 통해 표현되기에 축제는 예술성을 표방한다.

본래 고대 축제는 제의적 성격이 강했다. 고대에는 신에게 기원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축제가 존재했다. 축제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와 혼란, 일탈의 모습은 사회로 재편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다. 공동체 구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축제가 행해졌으며,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뤘던 것이다.

그러한 축제가 산업화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갔다. 오늘날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고,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축제를 찾아간다. 여가 생활을 누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축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축제는 자연스럽게 관광산업과 연계되고 있다. 축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파악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대표 축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지역축제는 총 733개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대표/최우수/우수/유망 축제를 선정하는데, 2017년에는 총 41개의 축제가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 축제는 3개로,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전북 김제지평선축제, 경북 문화찾사발축제이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와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최우수축제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우수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와 시흥갯골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낯선 즐거움, 새로운 문화 체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축제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바라는데, 그러한 경험은 잘 만들어진 축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유례없이 긴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거리예술축제에 다녀왔다.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된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시내 도심 11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서울 시내 한복판이 그야말로 축제의 장으로 바뀐 것이었다. 거리축제인 만큼 예술인들이 펼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기꺼이 흥겨운 축제의 장 안으로 빠져 들어갔다. 때론 내가 사는 지역이 한순간 낯선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늘 지나다니던 거리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 체험은 언제나 즐겁다.

박물관의 진정한 가치 증대 방안

김동선 •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

얼마 전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tv프로그램이 높은 관심과 시청률 속에 아쉬운 종영을 하였다. 과학, 음악, 문학, 사회과학,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여행을 하며 방대한 지식을 뽐내내는 이 프로그램은 제작 PD의 호언처럼 눈보다는 우리의 뇌가 즐거워지는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필자가 특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박물관 탐방’ 이었다. 특히 한 출연자의 ‘어느 장소하면 ○○박물관’ 이라는 멘트는 박물관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의 위상과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출연자들이 화수분처럼 뽐내내는 방대한 지식이었다. ‘어떻게 저런 내용까지 알 수 있을까?’ 라는 감탄이 생길 정도로 프로그램은 그 제목처럼 잡학사전을 찬찬히 읽은 듯 한 감흥을 주었다. 물론 패널들의 지식은 각자의 사고와 경험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틈틈이 소개한 책과 박물관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패널들이 언급한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방문한 박물관에도 방송 나가기 전과 비교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았을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실제로 필자는 연휴기간에 방송에 나온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식의 원천에 책은 말할 것도 없고 박물관이 언급된 점에 있어서 박물관이 ‘지식의 보고’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켜주며 박물관의 위상을 높인 것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시청자들에게 ‘아 저런 종류의 박물관도 있었구나!’ 하는 박물관의 다양성을 알려주었고 또한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편견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하면 우리를 압도하는 웅장한 건축물과 유리진열장 안의 오래된 유물 그리고 그 유물에 대한 어려운 설명문과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떠올리는 사람

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방문한 박물관에서는 가수 토이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동심의 표상인 피노키오를 만날 수 있었으며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박물관이 단순한 구식의 캐비닛이 아닌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 오락이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진 매력적인 장소라는 것을 어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위상도 높였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더욱 주목한 점은 바로 패널들이 박물관의 가치를 찾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고 단순히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면 시청자들이 그렇게 높은 몰입도를 경험하진 못했을 것이다. 패널들은 개별 유물에서 무궁무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그것이 개인의 경험에서 온 것이든 혹은 역사적 일화이든 간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패널들은 박물관이야말로 ‘스토리의 보고’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다. 유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스토리를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여 관람객과 유물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때 박물관의 진정한 가치가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천은 일찌감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문화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시이다. 그중에서도 지식의 보고인 ‘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표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을 설립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질로써 한 번 더 도약할 시기인 것 같다. 특히 다양한 테마박물관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스토리를 찾아서 세련되게 다듬고 정제하여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재창조한다면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박물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과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능 있는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해 박물관에서 활용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서로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

웰다잉이라는 문화변동 · 김평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 · 채경진

장애와 예술, 그리고 특별한 사건 · 김인규

‘빅브라더’ e-나라도움 · 고영직

문화예술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모두 획득하기 위하여 · 이상민

현장의 혼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언어와 레이어 · 김정아

문체부,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 · 김은영

현시대 영유아의 뇌 잠깐 들여다보기 - 감각과 지각과정을 중심으로 · 장재키

웰다잉이라는 문화변동 웰다잉 문화의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의 과제

김평수 • 문화콘텐츠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한 시대를 살다가 죽은 이들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알지만 제 일이라고는 생각 못 하며 살아간다. 죽음이라는 큰 이별은 고사하고 연인과 헤어지는 작은 이별에도 자신의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 하물며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이른다면 누구인들 담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별은 낯선 일이 아니다. 인간의 탄생도 이별로부터 시작된다. 태아에게 엄마의 자궁은 자아와 타자가 구분되지 않는 완벽한 일체의 세계이자 우주다. 자궁 속에서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유영한다. 탄생이란 엄마의 자궁이라는 완전한 세계에서 불완전한 세계로의 이행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듯 새 생명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천국에서 추방당함으로 시작된다. 즉 일체의 세계로부터의 분리다. 새 생명은 차가운 공기, 낯선 촉감, 하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으며 생명의 첫걸음을 뗀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신체를 인지하고 엄마의 체취를 구분하는 순간이 바로 완벽한 일체였던 엄마와의 영원한 이별의 순간인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주어진 시간을 살고 나면 필연적으로 소멸한다. 소멸의 운명은 생명의 유전자 속에 시계처럼 예정되어 있다. 살아가며 계절의 변화를 보듯 자연의 변화와 우주의 운동이란 탄생과 소멸의 법칙임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생명의 소멸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일상임을 알 수 있다. 자연과 친화했던 과거의 인류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존재의 통과 의례로 받아들였다. 탄생을 생의 시작이라면 죽음은 생의 마무리임을 인지했다. 물론 죽음을 인지하는 동물이 인간뿐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지구 상의 생물 중 인간이 거의 드물게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심지어는 죽음 뒤의 세계까지도 상상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끝이 아니라 우주의 운동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동안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가 대유행하였다. 원래 미국의 중산층이 첨단 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대안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말로 '참살이'로 번

역되는 웰빙이란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며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경제적 풍요를 중시하던 문화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이 삶의 중요한 척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국내에 수입된 웰빙 문화는 이런 원래 의미와는 달리 명상이나 요가, 스파(SPA)와 피트니스 클럽을 즐기면서 유기농이나 건강식을 즐기는 중산층 문화처럼 왜곡되어 전파되었다. 이렇게 왜곡된 상업적 웰빙 문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몇 년 전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로병사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예전엔 집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다.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산업화하면서 이전 생로병사의 일이 병원에서 이뤄진다. 이런 변화 중 가장 부정적인 현상을 꼽으라면 임종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재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환자를 병원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엔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연명 치료에만 집중한 나머지 환자의 의사와 존엄성은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연명치료에 집착하고 호스피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는 고통당하고,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감과 상처만 남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죽음 문화다.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부모이거나 자녀이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존중받는 존재였는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리할 시간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최근의 '웰다잉 운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죽음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2009년 2월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치료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세상을 마감하기 전 각막을 기증하였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역시 췌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지나온 생에 대한 자서전을 썼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자신의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명사들의 품위 있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자발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도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서점가에는 웰다잉에 관한 서적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문화에 발맞추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수원시의 <연화장 웰다잉 프로젝트>, 용인시의 <

하늘 소풍 나들이> 프로그램, 서울시설공단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웰다잉 복합 체험관>까지 건립하고 웰다잉 프로그램 전파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은 죽음을 문화·예술적으로 치유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강의나 입관체험과 유서 쓰기, 버킷 리스트 쓰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도 웰다잉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인 문화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나 체험관 시설의 건립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웰다잉의 문화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 등의 역할은 당연히 다른 성격이어야 한다.

2016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올해 8월 시행되는 가운데, 치료 효과가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질병예후 설명 의무를 법제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암 이외의 질병에도 단계적으로 법안을 확대 적용해야 하지만, 질병마다 ‘말기 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도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런 허술한 정책은 웰다잉법의 취지를 살려내거나 병원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어렵다. 호스피스 인력 양성이나 호스피스 전문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만 애써 만든 법의 취지에 맞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정책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뒷받침할 예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 등은 웰다잉의 문화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웰빙은 살아있는 동안의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추구하는 생활태도다.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다. 웰다잉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죽음을 두려움 고통이 아닌 우주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이다. 즉, 존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은 영혼을 위한 웰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이 이별로부터 시작했듯이 죽음 또한 자신의 육신은 물론 사랑했던 모든 것들과의 이별이다.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다.

죽음에 관한 담론을 터부시해온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순간적인 유행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정신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다. 모든 공공기관은 인간적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

채경진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문화융성 국정 기조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의 정착, ‘문화재정 2%’ 목표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례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 및 활성화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민선 1기부터 ‘문화도시’로의 지향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추진 중인 부천시는 2014년 기준 지역문화지수가 전국 4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동안 문화유산, 인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보유하고있던 결과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일선 문화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의 예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출연금 중 시설운영 경상관리비가 56%에 달하는 관계로,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외부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부천시에 특화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급증하고 재단 간 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자체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곧 지역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단의 자율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조례 등의 근거 부족으로 재단 자체 수익사업이 없다는 부분도 재단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같은 광역권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과 성남, 안양의 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술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부천시의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부재하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익사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면, 다음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기존	개정안
신설	제0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산하단체인 문화재단도 개별적으로 기부·후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양도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에 제정(2016년 6월)된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기부·후원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해당 조례가 일반적인 기부자의 관리와 혜택, 부정청탁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기부 독려보다는 ‘기부자 예우’에 한정한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예술후원법, 2014년 7월 제정)이 있는데, 해당 법률에는 후원매개단체와 조세감면사항, 후원자 포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주지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례 이외에 후원에 관한 조례가 없고, 이 조례를 따르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으로서는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후원제도를 활성화하기에 다소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다.

경상북도와 제주도에서는 이미 문화예술후원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2016년 7월 제정)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2016년 9월 제정)가 바로 그것이다. 경상북도의 조례에는 후원 활성화를 위한 도의 의지와 예산 지원의 범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최소단위의 노력이 명시되어 있다. 제주도의 조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의 범위, 주무 단체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기술되어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무 단체의 설치의 조례의 지속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제주도의 조례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볼 때, 향후 타 광역 또는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에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부천시 역시 문화예술후원조례의 제정으로 후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구성안을 구상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적지 않은 해외사례를 통해서 기부·후원은 자원 투자라는 단순한 경제의 논리를 벗어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자 책임의식의 표명임을 알 수 있다. 시민이 문화기관에 기부·후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기관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의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부·후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이라

[표 2] (가칭) 「부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설을 위한 구성안

규정	중요 포함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제1항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이용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이하 매개단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개단체 지정·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후원 활성화에 참여 및 공이 있을 경우 포상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한계와 더불어 경제적 상황이나 변수(메르스,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많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 같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미흡한 경우 추진 동력이 어려움에 상존할 가능성이 큰 관계로 세밀한 접근이 없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문화특별시 부천은 기부·후원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역의 사정에 걸맞은 자체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특색을 강화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의 혜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의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와 예술, 그리고 특별한 사건

김인규 • 작가·前서천고등학교 미술교사

내가 발달장애 아동들과 미술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1년쯤이니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드는 셈이고, 이제 그 아이들도 성인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덕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선택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미술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면 할수록 흥미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도 아이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차 나의 의도적인 개입을 줄이고 가급적 재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위치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주어진 재료로 자신이 놀고 싶은 만큼 놀았으며, 나는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바를 맞춰주었고 그것은 그렇게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성장을 함께하며 6년이 지난 것이다.

그들에게 장애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순간 미흡한 존재, 그래서 무언가 더 채워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장애교육은 장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그런 목적성을 바닥에 깔고 있다. 부모들도 발달을 촉진시켜 비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게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얼마나 허망한 바람인가! 그래서인지 매뉴얼에 따라 기능적으로 수행하거나, 조금만 손을 대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반 제품이나, 강사가 손길에 기대어 그럴 듯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허망한 욕망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을 보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으로 방향을 되돌려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설령 장애인이 가질 것을 못 가진 존재일지라도 장애인 순간 그것은 애초에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선천적일 때 그렇다. 우리는 장애에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는 자를

들이대지만, 장애인에게는 애초에 없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정상성은 의미가 없는 셈이다. 외팔이의 나라에서는 외팔이는 장애가 아닌 바와 같다. 다만 그것은 두 팔과 비교하여 상대화된 것일 뿐이다. 더구나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비교 의식마저 희박하기 때문에 더욱 무의미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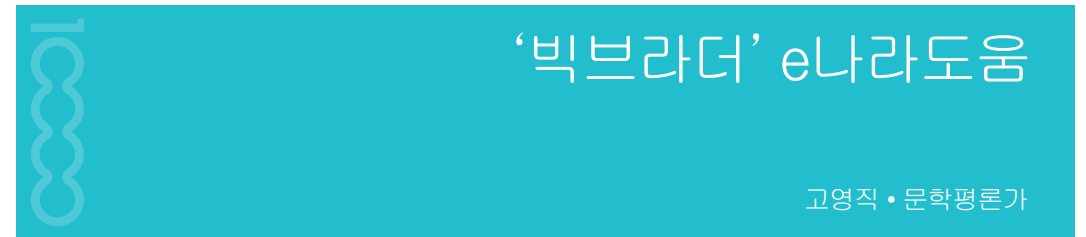
반면 놀라운 것은 그들은 비장애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 아동을 보면 비교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 그리고 못 그린다는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점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만일 어떤 교사가 잘 그린 그림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주입하고 의식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이다. 들짐승에게 날짐승을 본보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들짐승에게는 들짐승만의 세계가 있으며 그것을 탐하면 탐할수록 그만큼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외적 아우라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은 있는 그대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그런 면에서 그런 누림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 6년여 세월을 함께 하며 그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나누었다. 만일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가진 그런 세계를 비장애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비교의식에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우리의 부자유를 그들의 예술적 성과물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예술 활동 성과를 통해서 정상성을 뒤집어 볼 수 있으며, 존재의 심연을 더 넓게 펼쳐낼 수 있을지 모른다. 장애인의 예술활동에서 발표의 기회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작년까지 3차례의 전시회를 가졌고, 작품을 판매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Disabled를 전제로 한 Able art를 반대한다. '장애인임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가! 그것은 특수한 예술일지언정 보편 예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물론 장애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겠지만, 상당한 장애가 극복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나는 그런 면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으로 ‘미술’의 가치에 특별히 주목한다. 미술은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얽매임이 적다. 음악의 경우는 일정한 규칙성을 요구하고, 춤도 몸을 일정하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미술은 매체에서부터 방법에까지 어떠한 제한조건이 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다. 매우 개별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어 함께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에게도 미술은 기회를 준다. 겨우 붓을 잡을 수 있는 중증 뇌성마비 친구가 단말마적인 손의 움직임으로 캔버스에 물감 자국을 만들면서 그토록 즐거워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활동실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들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리프트가 달린 차와 휠체어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작업장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정에 방문할 수 있다면... 교육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중증 자폐성 아이가 몇 시간이고 붓질 자국에 깔깔거리며 매달렸던 순간도 잊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삶의 복지로 보인다. 특히 일상 활동이 매우 취약하고,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감이나 종이와 같은 재료는 설령 파괴적인 행동이라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빛을 낸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사건을 접한다는 것은 장애이든 아니든 온전히 자신과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이라면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연극의 3요소는 배우, 관객, 무대인가. 연극판에서 연극의 3요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연극 개론』 같은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기획서, 보조금, 정산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돈이 없으면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예술인들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극의 3요소 중 하나인 정산(精算) 절차가 올해부터는 히말라야 등산(登山)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푸념이 나온다. 올초 1월 2일 1차 개통에 이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전면 개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때문이다. ‘e나라도움’으로 더 잘 알려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말해 보조금 집행을 ‘사전(事前)’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고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e나라도움 전면 도입 이전에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해 정산을 했다. 문제는 복지 부문 및 문화예술 부문에 가장 먼저 도입된 e나라도움이 국민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신’을 전제로 한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모두 7단계의 검증체제로 촘촘히 구성된 검증 시스템을 보라. 유사 또는 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와 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중요재산 사후 검증 등 7단계의 검증체계를 모두 무사히 패스해야만 정산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활동 전 과정을 보고하고, 필요한 금액을 결제할 때마다 시스템 상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한 푼의 지출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서류 없이는 지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쯤되면 e나라도움은 규칙들의 유토피아(the utopia of rules)를 대한민국에 실현하고자 한 관료제 유토피아의 오래된 비원을 구현한 것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의, 행정에 의한, 행정을 위한 ‘행정독재’의 길이 열린 셈이랄까.

과연 e나라도움은 정부가 표방하듯이 세금 지킴이 구실을 제대로 하고, 정보 도우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 나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시민들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촛불을 든 행위는 결국 잘못된 행정독재에 맞서 인간의 말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설치한 근거를 보면,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2014.12.4.)을 마련한 시점인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16 이후 청와대-국정원-문체부를 비롯한 국가 행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혈안이던 시점에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e나라도움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나라도움은 나랏돈을 마음껏 사냥했던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큰 도둑’을 잡는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돈줄을 통해 보조금 수혜자들을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시스템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고 보조금의 운용은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가장 최소단위, 가장 약한 단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e나라도움은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한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장 열악한 단위에 해당되는 복지 및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먼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가난을 엄벌하겠다’는 식의 행정독재적 발상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가난을 엄벌하다』라는 책에서 ‘시장주의-사회보조 축소-형벌 확대’가 긴밀히 맞물려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형태라고 비판한다. ‘벤츠 타는 타워팰리스 수급자’ 같은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는 장치는 꼭 e나라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국고 보조금은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질이 떨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항의의 목소리(voice)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되어야 할 국고 보조금 시스템은 언제든지 공공악(public evil)이 될 수도 있다. 정책 효율성과 투명성의 표정을 한 공공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공공재는 차라리 ‘빅브라더’라고 간주할 수 있다. e나라도움이라는 작명에서 조지 오웰식 뉴스피크(Newspak, 新語)의 흔적을 엿보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돌려막는’ 것이 카드만은 아닌 것이다. 행정은 언어를 돌려막는 것을 더 선호한다. 언어에 반영된 행정의 이러한 무의식을 생각하면 다양성보다는 모노톤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

노톤을 더 선호하는 행정의 행태에 대해 미국 정치학자 제임스 C. 스콧은 ‘행정가의 숲’이라고 명명한다.

행정가의 숲을 대체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제임스 스콧은 ‘자연주의자의 숲’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e나라도움은 출생의 비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국민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 전 국민을 잠재적 세금도둑으로 취급하려는 의식적·무의식적 사고의 결과물이고, 그런 사고가 낳은 기술 관료제의 도구일 뿐이다. e나라도움에 대한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신뢰의 철회 문제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문화예술인들을 정책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대하려는 행정의 근본적인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 e나라도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내지는 폐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 한, 연극의 3요소는 이제 첫째도 정산, 둘째도 정산, 셋째도 정산이라는 농담이 결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문화정책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꽃은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

문화예술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모두 획득하기 위하여

이상민 • 가톨릭대학교 교수

무슨 일이든 평가는 어렵다. 평가를 하는 입장과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 자체에 대한 갈등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이런 평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48년 유엔에서는 문화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 패러다임 내에서 개발우선정책을 시행하느라 문화권 확보에 소홀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초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문화가 단순히 여가나 오락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문화예술은 독립성 확보와 공공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은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시장에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전 국민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때론 문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전 정권에서처럼 국정농단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폐해를 일찌감치 경험한 선진사회에서는 문화예술정책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검열을 배제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도입하였다. 다행히 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팔길이 원칙을 시사했다. 이

원칙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팔길이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행기관과 마찰이 일어나거나,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아 정책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를 많이 보왔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예술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통한 창의적 생산을 중시하는 수행기관과 정책사업으로 계획-과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기관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 먼저 팔길이 원칙을 표방하며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와 같은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의 문화화’, 즉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그러한 간극을 좁혀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화예술은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창조적 활동을 통해 국민의 문화 역량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행기관은 지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엄정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지원기관의 책임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질 높은 삶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잘 다스리는 협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장의 혼란 :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언어와 레이어

김정아 • 제주문화기획학교 교장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문화예술지원 영역도 점차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교육, 지역활성화,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되어 간다. 해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진행된다. 예술창작지원을 중심에 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차 카테고리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공통,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유지컬,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 소외계층문화순회로 나누고 각 분야별 세부사업명으로 나뉘어진다. 대체로 사업명이 명료해서 지원사업명만 보아도 대상이 누구지, 지원의 목적이 무엇지 직관적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차 카테고리를 교육인력지원, 예술협력사업, 예술교육기반으로 나누고 하위에 2차 카테고리를 두었다. 문제는 각각의 카테고리라 사업들이 MECE하지 않다는 점이다. MECE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로, 'Mutually Exclusive'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타적이면서 'Collectively Exhaustive'는 전체를 모아놓았을 때는 누락된 부분 없이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을 비교하고 어느 한쪽의 우위를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원주체 : 위원회 ↔ 수혜 : 예술가]라는 단편적 레이어(layer)¹ 구조이다. 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주체 : 진흥원 ↔ 수혜 : 예술가, 사회] 혹은 [지원주체 : 진흥원, 예술가 ↔ 수혜 : 사회] 등 해석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 구조의 레이어(layer)가 작동된다. 중층적 구조의 레이어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가진 주체들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주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같은 기표에 대해 다른 기의가 작동할 수 있다².

예를 들어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대해 사회일반은 '행복한', '아름다운', '장식적인'이란 기대를 가진다면, 예술계는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묻는', '의심하는', '다르게 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은 '치료하는', '치유하는', '돌보는' 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같은 '문화예술'이란 기표에 대해 이같은 참여주체별 동상이몽은 '모호함'과 '혼돈', '갈등'과 '충돌'을 낳는다. 더불어 공모에 당선된 후 지원의 수혜자라 생각했던 예술가(단체)들은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등 다양한 이름의 현장점검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의 선정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하며, 막상 현장에서는 교육 지원의 주체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된 중층적 레이어 구조의 사업들은 '사업명'과 '사업목적'을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 '사업명'과 '사업목적'이 명료해져야 지원의 전 과정이 논리적 유기성을 가질 수 있다.

2012년 주5일제와 더불어 시작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현장의 혼란(예술단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지, 단순 여가활동을 돕는 돌봄사업인지)은 여전하며, 특히 같은 진흥원의 지원사업인 지역특성화 사업과의 변별성 부분에 대한 질문(지역특성을 반영하면 꿈다락 사업은 아닌지, 토요일에 진행되는 것은 꿈다락이고 평일에 진행되는 것은 지역특성화인지)도 계속 되고 있다.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결정할 때 과연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되는지 물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 1 관계총을 뜻한다.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개의 논리적인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각각의 객체를 하나의 레이어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레이어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객체들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2 기표(記表, 프랑스어 : signifiant 시니피앙[*])와 기의(記意, 프랑스어 : signifié 시니피에[*])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에 의해 정의된 언어학 용어이다. 기표란 바다라는 말에서 "바다"라는 문자와 /bada/라는 음성을 말한다. 기의는 이 기표에 의해 의미되거나 표시되는 바다의 이미지와 바다라는 개념 또는 의미 내용이다. 기표와 기의를 하나로 묶어 기호(記號, 프랑스어 : signe 사인[*])라고 한다.

문체부,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

김은영 • 자바르페 이사

오랫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수많은 관련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며, 어떤 처벌을 해야 할 것인가? 블랙리스트는 단지 종이에 적힌 이름일 뿐이다. 이 리스트가 배제와 차별, 불이익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력자, 실행자들이 필요했다. 그들은 위에서 시킨 일을 기계적으로 했으니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조직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선택을 강요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부당한 명령들은 블랙리스트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 예는 일제 식민지 시절의 조선인 하급 관리들, 2차 대전 시 파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독일인 장교, 나치 시대의 많은 관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까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많은 나치 전범을 인터뷰하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다. 아렌트는 나치 정권의 2인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에게 “당신은 임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아이히만은 “나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충실히 움직인 관료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 관심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주어진 일을 잘해내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낼 때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열차 안의 모든 의자를 뜯어버리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보다 많은 사람이 짐승처럼 서로 포개지고 서있는 상태로 수용소까지 운반되었다. 그의 효율성 그 어디에도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성과 양심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 집시 400만 명, 기타 장애자, 동성연애자, 부랑자 등 자신들의 생각과 정책 구상에 맞지 않는 많은 인간들을 살해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살인마 사이코패스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에서 군대, 경찰, 공무원 등 국가 체계를 이용해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이기에 더 끔직하다. 여기에 동원되었던 군대, 경찰, 공무원들은 죄의식이나 비판 의식 없이 각종 학살과 관련해 자신이 맡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이들 대부분은 잔인한 살인마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었고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부인의 생일날 꽃을 선물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랜트는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파시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라며 생각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생각’만이 우리가 위에서 시키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조직의 도구’, ‘효율성의 도구’가 아니라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각하는 사람,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만이 선택의 기로에서 주어진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고민할 것이다.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블랙리스트의 총체적인 설계자 뿐 아니라 암암리에 여기에 협조했던 사람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는 비문화적인 요소, 비민주적인 요소 역시 척결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가는’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 사회, 속도와 성과에 가치를 둔 압축적 성장, 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전체를 끌고 가는 방식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사회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와 서열, 집단주의, 가부장적 문화를 수반한다. 블랙리스트는 이러한 비문화적인 토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내 신념이나 상식에 반하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어려운 조직,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의 일원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들은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문체부내의 비민주적인 요소, 비문화적인 요소는 문화부의 각종 사업과 행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문체부는 예술가, 민간전문가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거버넌스,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술단체들이 느끼는 현장은 이와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량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심지어 관리 대상, 동원 대상, 위탁 업체, 대행 업체 등의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조직 내의 민주화,

문화에 대한 철학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지원기관과 수탁기관의 관계 속에서 민주성, 갑을관계, 비민주적인 행태가 개선되기 어렵다. 이것은 지금 책임자 처벌 뿐 아니라 문체부를 포함한 정부조직에 민주적인 문화, 문화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Hannah Arendt.(1963), Eichmann in Jerusalem 김선욱 옮김(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한길사



1.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감각과 지각경험의 결핍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영국 내 15,246가족을 추적 조사한 밀레니엄 코호트 스터디에 의하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혹은 DVD를 하루에 세 시간 이상 본 아기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기들보다, 당사자가 7세가 되었을 때, 지시 따르기가 안되고 감정 읽기나 관계 맺기에 문제를 가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¹.

지시 따르기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시대로 과제를 수행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네모 안에서 한 발을 들고 균형을 잡아보라는 말을 들으면 네모 밖이 아닌 안에, 한 발을 내려 놓지 않으려는 것에 목표를 두는 능력이다. 어렵거나 재미없다고 안 해 버리면 즉, 지시 따르기가 되지 않으면 게임이나 춤 등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린 나이의 지시 따르기, 감정 읽기, 관계 맺기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기초 소통 노하우가 되어 사회적 수행력(사회성이 좋다고 할 때의 수행능력)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회적 수행력과 텔레비전, 비디오, DVD등의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왜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미디어의 내용보다는 ‘미디어와 소통을 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은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노출되지 않았었다. 대신 미디어를 보고 듣는 방식이 사람들을 보고 듣는 방식과 달랐을 뿐이다.

집 안에서 미디어를 볼 때 사용하는 감각은 좁은 시야와 짧은 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각과 청각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감각기관이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대개 하나밖에 없다. 동시에 두 개의 화면을 보지는 않으니까. 어른의 경우는 그간의 감각경험들이 뇌에 기초 데이터로 쌓여 있기 때문에 특정 감각이 집중되더라도 그 감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아기

의 경우, 특히 더 어린 나이일수록 제한된 감각만 사용하게 되면 뇌의 기초데이터 자체가 부족해져 그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쉬운 예가 있다. 좁은 방에서 가까이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작은 비디오 화면에만 익숙한 어린이가 처음 학교에 가서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치자. 먼 거리에 있는 칠판과 교물거리는 여러 친구들의 뒷머리를 지나 선생님의 얼굴 중 특히 작은 두 눈을 쳐다보기가 쉬울까? 선생님의 커다란 몸의 여러 부분 중 하필이면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칠판의 어느 한 점을 쳐다볼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시간만큼? 실제로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은 이런 행동을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는 FFA(The Fusiform Face Area)모듈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 이 영역은 사물보다 얼굴과 비슷한 형태이거나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도 다양한 얼굴표정을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이다. 또, 종이컵을 보여줄 때보다 거기에 까만 두 점을 찍어서 마치 눈과 같은 느낌을 주면 더 어린 사람들은 더 오래 더 좋아하며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표정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배 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다. 이렇게 얼굴표정에 따른 행동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어린 영유아들은 스스로의 위치감각, 평형감각, 압력감각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은 정서나 감정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2개월 미만의 아기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자. 아기가 집에서 TV와 비디오를 보고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고 어른들이 식사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본다. 집에 와서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보면서 논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기가 엄마와 함께 2세 미만을 위한 연극을 보러 와서 다른 아기와 다른 엄마의 얼굴과 행동을 본다. 연령 특성에 맞춘 배우들의 표정과 행동에 따른 연기를 친구들과 함께 본다. 관객이 그룹으로서 함께 느끼는 정서경험은 개인이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지각하는 세상이 혼자서 바라보는 손바닥 안의 네모 뿐인 아기와 여럿이 함께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배우들의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보고 있는 아기의 뇌 안을 한 번 상상해 보자. 노는 시간과 자연 공간이 제한적인 한국, 특히 도시의 아동 관객들이 실제의 몸을 사용하는 자발적인 감각과 지각 경험은 예전에 비해 많이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현 시대의 아동 관객들의 결핍된 감각과 지각 경험을 채우는데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연극이 중

요한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함께 본다는 것과 함께 느낀다는 것

‘본다’와 ‘행동한다’를 뇌에서는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거울 신경 시스템이다. 거울 신경세포는 처음 원숭이류에게서 발견되어 행동을 모방하는 데 사용됨이 밝혀졌다. 인간에게는 이 거울 신경세포 자체는 없다. 다만 거울 신경 시스템 즉, 체제가 있어 더 복잡한 뇌기능들과 연계되어 사용되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 되는 시기가 바로 3세 미만일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인 14-24세 사이라고 한다.

거울 신경 시스템의 특징은 한마디로 “Watching is doing:보는 것이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인간의 뇌가 일정 정도 성숙해야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믿었다. 그러나 최근 신경과학 연구결과는 다르다. 뇌가 먼저 알아차리고 팔,다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크면 그 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통되어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². 그래서 각 문화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신체 행동이 형성되게 된다. 모방은 신경과 학적으로 사회적이다.

아기의 뇌 입장에서 연극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 연극을 하는 것이다. 아기의 뇌는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의 뇌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지각과정은 모방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도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각과정은 살아있는 몸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며³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체활동이라고 하였다⁴.

최근 신경과학연구 결과는 이러한 알아차리는 지각능력이 생후 5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⁵. 추상적 규칙은 7개월부터⁶,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예측하는 능력은 12개월이면 갖추게 된다고 한다⁷. 이러한 능력은 혼자 있을 때 보다 여럿이 같이 경험하게 될 때 그 감각과 지각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그 양상 또한 풍부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어떠한 사건을 함께 보고 함께 느끼는 연극 경험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 아기들은 연극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필요한 감각 정보와 상상력의 범주⁸”를 획득하게 된다⁹.

한국도 일본도 형제, 자매가 있는 아기들이 점점 줄고 있다. 스마트폰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계의 발달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감각, 지각하는 시간과 환경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혼자 방에 박혀 있는 히키코모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중독된 청소년기의 문제는 감각과 지각 과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접근은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야 한다. 정서가 가미된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감각과 지각은 청소년기가 지나기 전에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한 감각데이터를 확보해야 차후의 사회적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판단과 결정의 중요 역할을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감정이 담당한다는 것을 지난 14년간 증명해 왔다. 게다가 신체 표현을 통한 감정의 판단은 논리적 판단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서 더 빨리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1세 이전 아기의 뇌에서 진행되어¹⁰ 죽을 때까지 발달해 간다고 한다. 연극인들은 감각과 지각 경험이 결핍된 현대의 아기 관객들의 뇌에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데이터를 감각과 정서의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아기의 뇌는 배우의 뇌와 함께 ‘움직인다’.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서 아기의 뇌에 ‘함께 움직이는’ 경험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제목) 영아 : 0~ 12개월 미만 아기, 유아 : 13개월~36개월 아기

1 Kirstine Hansen and Heather Joshi edited, 2008, Millennium Cohort Study Third Survey: A User’s Guide to Initial Findings. Center for Longitudinal Studies,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2 Zarrilli, P. et al. (2006) Theatre Histories (2nd ed.) New York: Routledge pp.4-5

3 Everson, S. (1999) Aristotle on Perception. Clarendon Press

4 Magee, J. M. (2003) Unmixing the Intellect: Aristotle on the Cognitive Powers and Bodily Organs. Greenwood Press p.97

5 Kouider, Sid et al. “A Neural Marker of Perceptual Consciousness in Infants.” Science 19 April 2013: Vol. 340 No. 6130 pp. 376-380

6 Marcus, G.F. et al. “ Rule Learning by Seven-Month-Old Infants.” Science 1 January 1999: Vol. 283 no. 5398 pp. 77-80

7 Teglas, E. et al. “Pure Reasoning in 12-Month-Old Infants as Probabilistic Inference” Science 27 May 2011: Vol. 332 no. 6033 pp. 1054-1059

8 과학철학자 마이클 폴라니가 언급한 ‘Tacit Knowledge’ 개념. Polanyi, M. (199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 Cr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9 Richard Courtney(1989) Play, Drama & Thought 4th ed. Canada: Simon & Pierre pp.188-198

10 Meltzoff, A.N. et al. “Foundations for a New Science of Learning.” Science 17 July 2009: Vol. 325 no. 5938 pp. 284-288

2017 부천문화재단 정책웹진 「10,000(만)」

발 행 처 | 부천문화재단

발 행 인 | 손경년

편 집 인 | 심재연

기획총괄 | 정희숙

편집제작 | 김정아

사진제공 | 부천시

디자인/인쇄 | 해드림기획

발 행 일 | 2018. 4

©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14596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TEL 032.320.6300·FAX 032.326.6929

HOME PAGE www.bcf.or.kr·BLOG blog.naver.com/mybcf·TWITTER @bcfdagam

FACEBOOK @mybcf1004

비매품